

독도영유권 논란

독도 논쟁은 한일 간에서 계속 이루어졌다. 2008년 일본이 중학교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‘일본의 영토’라고 명기하는 등 그간 있었던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란 및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살펴본다.

□ 최근의 독도영유권 논쟁

- 일본 정부는 2008년 7월 14일 각료회의를 열고 2012년부터 전면 사용되는 새 중학교 사회과목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기로 결정¹⁾
 - * 일본 문부성은 지난 1996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 5종에 대한 검정을 통과
 - * 2005년 고이즈미 전 총리 시절 일본의 일본 문부과학성의 침략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인정한 사건(일본 후소사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)으로 한일 양국 간에 상당한 마찰을 초래한 바 있음
- 특정 출판사가 아닌 일본 문부과학성 주도로 역사 교과서를 왜곡해 우려가 큰 가운데, 향후 대부분의 일본 교과서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제작될 것으로 예상
 -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왜곡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역사적인 사실로 교육하려는 의도 하 교육과정 편성을 통해 공식화하려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추측
 - * 한편 2005년부터 일본 방위백서에도 계속 영토주장이 담기고 있는 상황

1) 일본 정부의 이번 방침은 보수 우파인 고이즈미 전 총리 시절인 2005년 3월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 당시 문부과학상인 나카야마 나리아키(中山成彬)은 차기 학습지도요령에 독도(일본명 다케시마)는 일본 땅이라고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, 이를 반영한 교과서 개정안이 준비되어 왔음

□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배경

-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파문은 지난 1953년부터 진행되었으며, 이후 주기적으로 일본 총리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
 - * 1953년 일본인들은 독도에 상륙하자 울릉도 주민들이 수비대를 결성해 대응
 - * 1977년, 1984년, 1996년, 2000년에는 일본 총리들의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
- 2005년엔 시마네현 의회가 ‘다케시마의 날’을 제정²⁾하여 국교수립 이후 한일 관계의 최대 위기가 초래됨
- 이후에도 일본 해양조사선이 독도로 출발했다가 우리 측 항의로 돌아가기도 했고(2006),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기(2008.2)도 하였음

□ 일본의 독도 교과서 논란 배경

- 현재 일본은 국제 분쟁화하기 위해서 독도문제를 주기적으로 이슈화
-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이지만, 힘의 논리에 입각한 국제사회에서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될 경우, 일본에게 영유권이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 국제 사법 재판소에 이양해 결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

□ 한국 정부의 대응

- 그간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해 일본과 공공연한 마찰을 야기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공고화하는 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
 - * 일본의 국제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'조용한 외교 원칙'을 고수해옴

2)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 2005년 3월 16일 오전 '다케시마(竹島:독도의 일본식 이름)의 날' 조례안이 가결. 총 38명의 의원 중 결석자 1명과 의장을 제외한 36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33명, 반대 2명, 기권 1명으로 통과

- 이에 따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나올 때마다 강한 어조로 시정을 요구했지만,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은 자제
 - * 정부는 지난 2005년 5월 ‘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’을 제정하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, 2006년 이래 매년 구체적인 세부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
-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영토 주권 침해로 간주, 그간 고수해온 조용한 외교 원칙에서 탈피해 전방위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하기로 함
 - * 특히 관련부처인 외교통상부, 국토해양부,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중심으로 일본에 대해 전면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방침

정부기관의 독도관련 대일 대응 전략

부처명	대응 전략
국토해양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△독도 및 주변해역의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△독도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 △독도관련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 보급 △독도 내 시설의 합리적 관리·운용 △울릉도와 연계한 독도관리체제 구축 등 5개 분야 14개 사업 진행 예정 ·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 강화를 위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연내 발표키로 함 · 시행계획에는 독도관리 현장사무소 설치, 독도 바다사자 복원 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더 추가될 것으로 알려짐
외교통상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한 일본대사(시게이에 도시노)를 불러 항의 · 주일 대사(권철현)가 일본 외무성으로 항의 방문 · 각종 국제회의 및 재외 공관을 통해 일본의 과거 침략사와 부상성을 집중 홍보할 계획
교육과학기술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관명의로 일본의 문부과학대신 앞으로 항의 서한 발송
경찰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경계 강화 예정

<참고 문헌>

청와대 (<http://www.president.go.kr/>), 외교통상부 (<http://www.mofat.go.kr/>),
 국토해양부 (<http://www.nitmg.go.kr/>), 교육과학기술부(<http://www.mest.go.kr/>)